대통령이 靑문서유출 지시하고 미르·K재단 설립·모금 주도

공소장에 드러난 박대통령 혐의

대기업 회장 회동 일정 지시
정유라 친구 부모 업체까지 챙겨
최씨 광고회사 광고 싹쓸이 도와
최순실 민원 창구로 전락

'검찰이 20일 '비선 실세 최순실(60)씨등 3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관계'라고 밝히는 '초강수'를 뒀다.

◇"박 대통령은 공동정범"=검찰은 이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공모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을 상대로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청와대 대외비 문서 유출 혐의 등 핵심 사안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두 재단 설립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출연금 모금을 사실상 주도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 7월 한류 확산과 문화·스포츠 인재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같은 달 20일께 당시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니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24~25일 대기업 총수들을 잇달아 독대하고 문화·체육 관련 재단 설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올해 3월 신동빈 롯데 회장과 단독 면담해 경기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비용으로 75억원 추가 출연을 직접 요구했다. 불이익을 우려한 롯데 측은 결국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식 이하 청탁도= 박 대통령은 인지도가 낮은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의 친구 부모 업체까지 손수 챙겼다. 최씨는 2013~2014년 흡착제 제작·판매업체 KD코퍼레이션 대표 이모씨로부터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속적으로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회사 소개 자료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최씨가 보낸 자료를 받은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KD코퍼레이션은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가진 훌륭한 회사다. 현대자동차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덕분에 이 회사는 작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현대차에 10억5990여만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했다.

최씨는 그 대가로 이씨로부터 2013년 12월께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 지난해 2월께와 올해 2월께 현금 2000만원을 각각 받고 올해 5월에는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 때 이씨가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또 박 대통령은 2월 16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시켜 최씨가 실소유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 홍보자료를 현대차에 전달하도록 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독대한 직후였다. 안 전 수석은 정 회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가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현대차는 이미 인하우스 광고회사인 이노션 등에 광고를 발주하기로 확정한 상태였으나 청와대 측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하고 이노션에 양해를 구한 뒤 해당 물량을 플레이그라운드에 배정했다. 결국, 최씨 회사 플레이그라운드는 올해 4~5월 70억6627만원 상당의 광고 5건을 현대차에서 수주했고, 덕분에 9억1807만원 상당의 이익을 거뒀다는 것이 수사 결과다. 또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가 KT 광고부서를 장악해 최씨 실소유의 광고회사가 부당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직접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관련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추가 수사…우병우 수사 계속하고 있다"

노승권 1차장 일문일답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장)은 2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인지 절차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노 차장은 "사실관계, 드러난 것을 중심으로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담은 내용은 충분히 입증 가능한 내용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대통령과의 공모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인정된다고 했는데. 공소장에도 적시?

▲네,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어떤 혐의에 공모인가?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 설립 관련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 기소가 된 부분 공모관계이다. 현대차그룹 관련 KD코퍼레이션과 플레이그라운드 부분도 인정됐다. 롯데 관련된 부분도 공모관계가 인정이 됐다. 포스코 관련된 부분 중에 펜싱팀 창단한 부분도 인정이 됐다. 그다음에 KT 관련된 부분, GKL 부분,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서도 인정됐다.

-대통령이 피의자로 인지된 거냐?

▲금일 수사 결과 발표하기 전에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 절차 거쳐서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으로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 입건됐단 말인가?

▲그렇다. 인지해서 입건되면 피의자가 되는 것이다.

-대통령은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공동정범인가?

▲그렇다.

-피의자 정식 입건했다. 신병확보 제외한 나머지 강제 수사도 가능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어떻게 수사할지 향후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다.

-제3자뇌물수수 혐의는 현재 공소사실에 없나? 앞으로 계속 수사할 것인가?

▲ 현재 공소사실에는 없다. 그러나 계속 수사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

-대통령이 가진 7개 기업 총수와의 독대에서 오간 내용이 공소장과 관련된 공소사실의 증거로 담기나, 아니면 향후 추가수사에 활용되나?

▲대부분은 공소장에 적시 되어 있다. 앞으로 추가 범죄 혐의 발견되면 언제든 수사할 예정이다.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 수사 진행하나?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 발의·가결 무난할 듯…헌재 결정은 난관

급물살 탄 탄핵 절차는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대통령 탄핵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탄핵 절차가 현실화할 경우 처리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은 제65조 1항에서 탄핵소추 사유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무'란 순수한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춘 행위도 포함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경우여야 하므로 정치적 무능력이나 단순한 부도덕 또는 정책 결정상의 과오는 해당하지않는다.

다만, 위헌이나 위법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법 위반의 중대성을 놓고 논란의 여지가 생길 가능성은 있다. 탄핵은 우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참여한 소추안 발의가 있어야 한다. 야권 3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상당수 의원들이 탄핵에 동조하는 상태여서 탄핵소추안 발의는 큰 무리없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쉽게 가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탄핵에 찬성하는 여야 의원이 200여명을 무난하게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지만, 실제 본회의에 참석하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될지 유동적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법사위원장이 소추의결서를 받는 순간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다.

이어 헌법재판소법상 법사위원장이 이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면 탄핵 절차가 개시된다.

탄핵소추안이 제출되면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재판관 9명 가운데 두 명이 내년 1월과 3월 퇴임한다는 점이 변수다. 탄핵을 심리해야 할 헌재가 새 재판관 임명 문제로 자칫 손을 놓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

청와대 "검찰 수사 공정하지 않아…심히 유감"

청와대는 20일 "인격 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차라리 헌법상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야권이 주장하고 나선 탄핵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검찰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뒤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그간 진행돼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나아가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관저에서 TV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지켜봤고, 참모진으로부터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의 발표가 최근 국정 업무 복귀에 속도를 내고 있던 박 대통령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여기에 오는 22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지난달 11일 이후 42일 만의 국무회의 참석이다. 이날 검찰 발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